

# 張 文 喆 議員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제3선거구

동구 제3선거구 장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성호 시장님,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5대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침체되어 있는 대전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고민해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정 질문을 통해 그간 본 의원이 의정활동에서 느낀 대전의 지역경제 문제점들과 대안들에 관하여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들으며, 대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들이 적극 모색되어지는 장이 되길 기대하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 지역 내 총생산 규모는 2000년 13조 5천억원에서 2004년 18조 5천억원으로, 지난 5년간 약 5조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국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대전시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2000년도나 2004년도나 여전히 2.3%에 머물러 있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내 총생산은 지역의 기업체수 및 기업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2006년 대전시 기업체 수는 약 9만여 개로, 울산시를 제외한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기업체 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인구 면에서 비슷한 광주시보다도 약 5천여 개의 기업체가 더 적은 실정입니다.

한편,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대전의 법인기업 중 자산 규모가 100억원을 넘는 중견기업체 수는 2003년 315개에서 2004년 294개로 21개나 감소하여 지역경기 정체 내지 약화의 심각성이 더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대전의 산업구조는 소비성 서비스산업으로의 편중 현상이 심화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제조업 비중은 지역 선도 산업의 부재로 나타나고 있어, 타 시·도에 비해 경제적인 역동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대전시는 지역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회복하고자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통해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97년 IMF 이후 IT, BT, 메카트로닉스, 첨단부품산업 등의 벤처기업들이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대전의 등록·비등록 벤처기업 수는 총 919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대전의 첨단벤처기업들이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전의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기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합니다.

한 예로, 2006년 1~3분기 대전의 벤처기업 수출액은 1억 6,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1.7%가 증가하였으나, 전국 16개 광역자치 단체 중에서 12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첨단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의 첨단벤처기업들이 대전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첨단산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전의 전략산업진흥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전의 전략산업진흥사업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4대 전략산업으로 생물의학, 정보통신, 고주파부품, 지능로봇 산업을 선정하여 산업자원부와 대전시가 협약을 체결하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기반구축사업과 첨단산업 혁신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전략산업진흥사업의 전반적 평가에 의하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중장기적·근본적 변화보다는 단기적·가시적 성과를 추구하고 있는데서 기인한 “전략 부재”와 각종 중앙정부 사업의 중복 및 복잡 다기화, 지역의 관심과 지원 부족,

중앙의 획일적 사업운영모델 및 과도한 간섭과 규제,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 확보장치 미흡, 실효성 없는 평가체제 등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전반적인 사업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및 대안으로 지역진흥사업의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다는 판단 아래, 기존 사업이 끝나는 2007년 이후의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한편,

제한적 지원방안의 하나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확신이 생긴 후에 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논의들이 현실화되어, 2007년 이후 지역전략산업의 추가사업이 중단된다면,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들은 엄청난 손실과 차질을 빚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대전의 경우, 지금까지 투자된 IT, BT, RT, RF 사업을 위한 건물과 장비들은 건물 임대료와 장비임대 수수료만

징수하게 되는 임대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 정책실패에 따른 운영 모순이 발생하여 지역에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시가 2007년 이후 추진할 사업 계획을 확실하게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전 테크노파크의 설립 재추진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얼마 전 산업자원부가 지역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였던 테크노파크 사업에서 전국 시·도 가운데 대전시와 제주도만을 제외한 14개 시·도 모두에 테크노파크를 설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대전시가 산업자원부의 테크노파크 사업에서 제외된 이유는 대덕연구개발특구 기능과 중복된다는 이유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4대전략 특화사업 기반구축, 첨단산업육성 및 혁신역량 강화사업, 대덕특구 내 첨단벤처기업 육성 등의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전시와 같이 기술혁신 역량이 결집되어 있는 지역에 테크노파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덕연구개발특구 사업이 중앙정부 전유의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전과 국가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누구나 함께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테크노파크가 우리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에 적극적으로 재 건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벤처기업의 유출을 막아야 합니다.

최근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우수 벤처기업들이 부족한 산업용지와 인력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제품생산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한 예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광학부품 전문 제조업체인 “햇빛 정보”는 중국 후베이성 무한에 부지 5,100평의 대규모 생산 공장을 설립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분석기기 전문 업체인 “케이맥”이 중국 곤산에 R&D센터 법인설립 현판식을 가졌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치를 개발하는 “가이야” 역시 중국 청도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대전에서 창업하여 성장해온 업체들이 대전을 등지고 다른 나라에 공장과 연구센터를 설립함으로써, 대전의 지역경제 위기를 한층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덕연구개발특구와 대전시의 상생발전 차원에서도, 특구 내 벤처기업들이 대전을 기반으로 원활한 기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대전시가 대덕연구개발특구 파급효과의 최대 수혜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대전시는 현재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덕 테크노밸리 내 대기업 용지 3만 1천평을 2,000~5,000평 규모의 소규모 형태로 분할 매각하여 첨단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산업용지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첨단기업들의 입주가 실현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안과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테크노밸리 산업용지의 불법매각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 신문 보도 내용에는 테크노밸리 내에 입주한 일부기업들이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거나,



합법적인 시세 차익을 노려 빈 건물을 짓고, 타인에게 매각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한 산업용지를 분양 받은 사실이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금처럼 산업용지가 부족하여 지역 기업들이 외부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일부 기업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프리미엄을 붙여 판다는 것은 대전시 입장에서 매우 큰 손실입니다.

따라서 산업용지의 불법투기를 방지할 대전시 차원의 조례 제정이라든지 제재조치를 명문화하여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시의 실업극복과 일자리 창출 부문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현재 전국의 평균 실업률이 3.3%에 이르는 가운데, 대전의 실업자 수는 3만 3,000명이며 실업률은 4.7%로, 서울의 실업률 4.6%를 넘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의 자체조사 결과,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들은 1년 단위의 고용과 100만원 미만의 임금이 대부분인 일자리들로써,

단순 노무직인 환경개선사업과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간병인 서비스, 노인 돌봄 서비스 등과 같은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은 현실적으로 실업문제 극복과 고용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시장님은 시의회의 시정연설에서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계획과 연계하여 복지·문화·환경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사회복지서비스는 국민과 시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복지서비스이며 권리이지, 이런 사회복지서비스가 사회적 일자리로 대체되어 실업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의 방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실업문제 극복과 고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단순 일자리 소개와 알선 기능에서 벗어나, 지역의 일자리 수요조사 및 관련 정책 개발, 구인 및 구직자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노동부 산하 지방 노동청과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구인 구직 알선 업무와 교육·훈련 업무만 해도 벅찬 상태로, 이들 기관에서 지역의 일자리 수요 조사와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체계적 관리 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대전시가  
앞장서고 중심이 되어 통합된 사회적 일자리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가 중심이 되고, 민간·시민단체, 지역의  
기업 등이 참여하는 “일자리창출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각 구청 단위로 “일자리창출센터”를 설치하여 양질의 일  
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들  
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시장께서는 검토해 보실 의  
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네트워크 기능을 활성화해 나아가야 합니다.

세계화 속에서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개척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  
제협력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대전시의 행정은 시대에 뒤  
떨어진 행정을 펼치고 있어,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뒤  
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해외시장개척단과 유망박람회 참관 지원, 통상 아카데미를 실시하여 지역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면서 「충청권경제협의회」를 기반으로, 해외사무소를 공동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대전시 해외사무실은 남경, 심양 2곳과 노보시비르스크 전시관 1곳으로, 파견 인원은 남경시에 행정 6급 1명, 심양시에 7급 1명이 파견되어 있으며,

운영비는 재정부족의 이유로 해외 사무실 2곳과 노보시비르스크 전시관 1곳에 7천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대전상품 전시관에는 우리시 파견 공무원 없이 현지인이 교류활동과 통상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어 조직과 인원, 예산 모두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시장님의 의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의 심양시는 대전시와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시실과 사무실, 직원 1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는 심양사무소 운영비를 연간 1천만원 정도만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어 예산지원에 소극적인 실정입니다.

또한 범 충청권 해외사무실 공동 활용을 위해 충남은 대전시 심양사무실에 직원 파견 및 예산 배정 등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반면,

대전시는 충남의 중국 상해 해외사무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하면서도 예산지원 및 인력을 파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 대전시의 해외 통상업무는 주변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으며, 상대 국가의 관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통상 사무실 기능과 우리 전략산업과의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엄선한 후,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통상관련 전문 인력을 확대 배치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교류 증진과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국제협력 업무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국제통상업무를 확대해 나아가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전시 국제통상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조직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에서 느끼고 고민해 왔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들에 대해,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